

저출산가정의 가계경제구조

차 경 욱(성신여자대학교 교수)

I. 서 론

『뒹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80년대), 『아빠, 혼자선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2004년 6월).

가족계획과 관련하여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내놓은 표어의 변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출산 억제를 강조해 오던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최근 들어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전환하였다. 1950년대 최고 6.3명에 이르렀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985년 이후 인구대체율(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replacement fertility rate)로 평가되는 2.1명 수준을 밑도는 상황이 되었고, 2002년에는 1.17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통계청, 2002; 조선일보 2004년 6월 28일자).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15~44세 여성 중 58.1%만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1991년 조사의 90.3%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또한 중앙일보에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의 24%가 출산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한 명의 자녀를 둔 부부의 57%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하였고, 기혼의 65%, 미혼의 68%가 자녀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답함으로써,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었다(중앙일보, 2004년 9월 15일자).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결혼가치관의 변화, 초혼연령 상승과 독신자 증가, 자녀관에 대한 변화, 여성취업률 증가에 따른 맞벌이 부부 증가, 육아에 대한 부담, 자녀양육 및 교육비 증가, 생활수준에 대한 욕구 증대 등 사회·경제적 현상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출산 현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깊은 관심과 걱정이 집중되는 원인 중 하나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있다. 출산율이 2.1에서 1.4 수준이 되는데 일본은 30년, 네덜란드는 29년이 걸린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불과 16년 밖에 안 걸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2040년 정도에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두 명이 일해서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일보, 2003년 2월 18일자). 세계 최저수준인 지금의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 2100년엔 한국의 인

구가 현재의 3분의 1인 1,621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동아일보, 2004년 1월 8일자). 출산율이 급락하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노령화가 노동생산성 저하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을 일으킨 원동력이 노동력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때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여겨진다.

때문에 최근에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구국의 결단'이며, 자녀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세 자녀를 둔 가정은 '부의 상징'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많은 조사와 언론에서는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녀양육비와 사교육비만 절감되면, 많은 가정들이 자녀출산에 적극적으로 될 것인가? 자녀가 한명인 직장주부들이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에게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 한 명의 자녀에게 과거 2-3명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양상이 확대된다면, 단순히 양육비나 교육비수준 감소와 같은 경제적 보상으로는 저출산현상의 지속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다각도에서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어떤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계들이 자녀 1명으로 자녀계획을 완료하고 저출산가계를 선택하며, 이들은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저출산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출산 현상의 현주소와 문제점 및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가정관리전략을 논의함으로써, 출산이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잠재적 부모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자녀수요에 대한 모델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생물적 과정이지만,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이다. 한 가정을 이룬 부부는 자녀를 낳을 것인지 낳지 않을 것인지, 만약 낳는다면, 언제 몇 명을 낳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가족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가 주는 효용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가족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녀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Becker, 1993; Bryant, 1990; 문숙재·정순희·허경옥, 2000). 자녀와 부모 상호간에는 물질적, 정신적 자원이전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효용이 창출된다. 예컨대, 부모-자녀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나 보살핌 등이 가족 내 만족감을 창출하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자녀가 가정의 경제활동을 위해 생산력을 제공한다. 과거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자녀가 생산 활동을 하는 노동력으로서 큰 역할하고, 그로 인한 효용이 매우 컸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수요가 컸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자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 보다는 자녀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이 더 크게 인식되면서 자녀를 낳을 것인가 낳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허경옥(199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자녀 가계의 경우 가계소득의 37%, 두 자녀 가계의 경우 46%가 지출되며,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양육비는 한 자녀가계의 경우 1억 2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상당부분이 투입되어 많은 가정에서 자녀교육비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비용 뿐 아니라, 많은 시간비용이 든다. 자녀양육의 시간비용은 결국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시간비용이며 그들이 다른 모든 대안활동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자녀양육의 기회비용이다. 이러한 효용과 비용의 분석을 설명하는 자녀에 대한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U = U(n, Z)$$

각 가족은 자녀(n)와 다른 모든 최종생산물(Z)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단, 자녀의 효용은 자녀의 수(n) 뿐 아니라, 각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의 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분석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질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각 가정마다 각기 다른 시간비용과 가정생산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총 비용 역시 다르다. 자녀양육비용을 P_n 이라고 하고, 가족의 효용에 영향을 주는 다른 모든 최종생산물(Z)의 비용을 π_z 라고 하면, 한 가정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P_n \cdot n + \pi_z \cdot Z = I$$

여기에서 I 는 가계의 총소득이며, 주어진 P_n , π_z , I 에서 n과 Z의 최적량은 예산제약과 한계효용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frac{\partial U}{\partial n} / \frac{\partial U}{\partial Z} = \frac{MU_n}{MU_z} = \frac{P_n}{\pi_z}$$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한 수요는 자녀의 상대비용과 총소득에 의해 달라진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일정할 때, 자녀의 상대비용 즉, π_z 에 대한 P_n 의 증가는 자녀에 대한 수요(n)를 감소시키고, 다른 최종생산물(Z)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가족경제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자녀의 상대비용과 총소득 및 자산수준을 고려하는 가운데, 자녀 수요에 대한 감소현상과 관련된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완료한 저출산가계와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저출산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결혼·출산관련 특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소득·소비지출구조, 자녀양육비용, 자산·부채구조 및 가계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표 1> 저출산가계의 구분기준 (n=355)

구 분		빈도 (%)
저출산가계	남편, 아내 모두 더 출산하기를 원하지 않음 (자녀 1명으로 출산완료)	154 (43.4%)
출산계획있는 가계	아내만 더 출산하기를 원함	34 (9.6%)
	남편만 더 출산하기를 원함	69 (19.4%)
	남편, 아내 모두 더 출산하기를 원함	98 (27.6%)
		합 201 (56.6%)

2. 연구대상의 표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녀가 1인이며,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가임여성이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해당가계에 속하는 부부 중 일인이 응답하되,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를 모두 기입하도록 고안하였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반가계와는 대별되는 특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되는 무자녀가계와 편모가계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4년 6월 28일부터 8월 30일 까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500부를 배포하여 423부가 회수되었으나, 부실기재되거나 분석에 용이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35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구대체율을 2.1로 평가하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02년 1.17, 2003년 1.19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종료하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가계를 저출산가계로 구분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출산가계는 총 조사대상자의 43.4%를 차지하였다. 반면 남편과 아내 중 한명만이라도 자녀를 더 낳기를 원하면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로 분류하여 비교집단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56.6%를 차지했다. 그러나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 중 과반수 이상이 부부 중 일방만 자녀출산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주양육자인 아내가 출산을 원치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자녀 1명으로 출산을 완료하고 저출산가계가 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즉 확실하게 둘째 자녀를 갖게 될 가계는 총 조사대상자의 27.6%에 불과한 것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특성 비교

자녀 1명으로 출산계획을 완료한 154 저출산가계와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201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결혼 및 출산관련 특성 등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 각각 38세, 35세 정도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남편 36세, 아내 33세)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남편의 교육수준과 직업은 저출산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아내의 교육수준과 직업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아내의 교육수준이 대졸인 경우에는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74.7%)가 출산계획 있는 가계(70.4%) 보다 많은 반면, 아내의 교육수준이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는 출산계획 있는 가계(25.1%)의 비율이 저출산가계(16.2%) 비율 보다 높았다.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출산계획을 가진 가계(55.3%)의 비율이 저출산가계(40.1%) 비율 보다 높았으며, 아내가 서비스직, 사무직이나 전문기술, 관리직에 속하는 가계들은 상대적으로 저출산을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취업한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출산 및 양육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그들의 노동참여 및 취업지위, 즉 자녀출산의 기회비용을 더 크게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여성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71%의 응답자들이 육아부담을 꼽음으로서, 사회적 편견·차별적 관행(13%)이나 직업의식의 부족(6.7%)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 것 역시 이와 상통하는 맥락일 것이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3백 86만원 정도로, 통계청(2004)이 발표한 2004년 2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2백 97만원)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저출산가계가 약 4백 10만원, 출산계획 있는 가계가 약 3백 70만원으로,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소득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거주형태의 경우, 저출산가계의 67.3%,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59.6%가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각 가계의 결혼 및 출산관련 특성들을 살펴보면,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결혼지속기간이 7.68년,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결혼지속기간이 5.30년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결혼 후 첫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의 기간 역시 저출산가계(1.95년)가 출산계획 있는 가계(1.61년)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서, 결혼지속기간이 길고 첫 자녀를 늦게 낳은 가계가 더 이상 출산을 계획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각 가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전체적으로 볼 때, 60%가량이 2명이라고 답했으며, 평균 2.04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상적인 자녀수가 1명이라고 답한 가계는 20.7%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 자녀 1명으로 자녀계획을 완료한 저출산가계가 43.4%라는 점, 특히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의 67.5%가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 이상이라고 답한 점을 볼 때,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의해 자녀 1명으로 자녀계획을 완료하는 가계가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특성 비교^{a)}

변인		전체 (n=355) ^{b)}	저출산가계 (n=154)	출산계획 있는 가계 (n=201)	t / χ^2
사회경제적 변인					
연령 (세)	남편	36.54(4.48)	37.66(4.27)	35.65(4.35)	4.35***
	아내	34.16(4.30)	35.28(4.19)	33.28(4.07)	4.54***
학력	남편 고졸이하 대졸(전문대졸) 대학원 이상	19 (5.4) 231(65.3) 104(29.4)	8 (5.2) 100(64.9) 46(29.9)	11 (5.5) 131(65.5) 58(29.0)	0.42
	아내 고졸이하 대졸(전문대졸) 대학원 이상	23 (6.5) 255(72.2) 75(21.2)	14 (9.1) 115 (74.7) 25 (16.2)	9 (4.5) 140(70.4) 50(25.1)	6.24*
직업	남편 무직, 학생 서비스/사무직 전문기술/관리직	14 (4.1) 144(42.5) 181(53.4)	6 71 ^(4.0) (47.3) 73 ^(48.7)	8 (4.2) 73(38.6) 108(57.1)	2.63
	아내 전업주부, 학생 서비스/사무직 전문기술/관리직	170(48.7) 56(16.0) 123(35.2)	61(40.1) 32(21.1) 59(38.8)	109(55.3) 24(12.2) 64(32.5)	9.25**
월평균가계소득 (천원)		3,867(1,780)	4,106(1,858)	3,707(1,706)	2.32*
거주 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221(63.0) 130(37.0)	103(67.3) 50(32.7)	118(59.6) 80(40.4)	2.93
결혼 및 출산관련 변인					
결혼지속기간		6.35(4.43)	7.68(4.48)	5.30(4.14)	5.13***
결혼~첫 자녀 출산까지 기간		1.76(1.27)	1.95(1.57)	1.61(0.98)	2.37*
이상 자녀수	1명 2명 3명 이상	73(20.7) 211(59.8) 69(19.6)	50(32.5) 83(53.9) 21(13.6)	23(11.6) 128(64.3) 48(24.1)	29.5***
	평균	2.04(0.76)	1.84(0.75)	2.16(0.68)	-4.18***

^{a)} 각 수치는 평균(표준편차) 또는 빈도(%)를 나타냄

^{b)} 결측값(missing value)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 p<.05, **p<.01, ***p<.001

2.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1) 소득 및 소비지출구조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구조를 비교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저출산가계의 월평균소득(4백 10만원)이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월평균소득(3백 70만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관심이 집중되는 결과이다. 왜냐하면 저출산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녀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비, 양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보고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더 낮은 가계가 저출산을 선택하고, 소득수준이 더 높은 가계가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맞벌이부부의 가계소득이 높고, 취업주부의 경우 자녀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녀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용한 소득 보다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가계의 특성에 따라 자녀양육의 질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다르므로, 자녀를 한 명만 낳고도 2-3명 이상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려는 가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모든 조사대상이 자녀가 1명인 핵가족 가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분류된 두 집단 간에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등의 소비지출비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규모

(n=355, 단위: 천원)

소비지출비목	저출산가계 (n=154)a)	출산계획있는 가계 (n=201)	t-stat	지출비(ratio) 저출산/출산계획
월평균가계소득	4,105.9	3,706.6	2.32*	1.11
총소비지출	2,629.6	2,354.1	1.57	1.12
식료품비	462.4	406.5	2.02*	1.14
외식비	269.9	258.7	0.41	1.04
주거비	252.7	246.7	0.18	1.02
광열·수도비	106.6	95.5	1.52	1.12
가구집기·가사용품비	88.7	78.4	1.32	1.13
피복·신발비	198.0	160.9	2.01*	1.24
보건·의료비	91.4	72.4	2.87**	1.26
교육비	546.5	463.3	2.75**	1.18
교양·오락비	123.6	96.5	2.38*	1.28
교통·통신비	268.2	255.0	0.71	1.05
기타소비지출	211.6	218.4	-0.23	0.97

a) 결측값(missing value)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 p<.05 **p<.01 ***p<.001

기타소비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출산가계는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 보다 많은 액수를 지출하고 있었다.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식료품비의 경우, 저출산가계가 46만원,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가 41만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피복·신발비도 저출산가계(20만원)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16만원) 보다 유의하게 많이 지출했으며, 보건의료비 역시 약 19만원 정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저출산가계가 많은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와 교양·오락비에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저출산가계의 교육비는 55만원,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교육비는 46만원 수준이었고, 저출산가계는 교양·오락비로 12만원,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는 교양·오락비로 9만 6천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서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식료품비, 외식비, 교통·통신비의 순으로 지출비중이 높았다.

<표 4>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자녀양육관련 소비지출 (n=355)

지출 규모	저출산가계 (n=154) ^{a)}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 (n=201)	t-stat	지출비(ratio) 저출산/출산계획
	평균액 (천원)			
자녀양육비 총액	673.2	565.1	2.12*	1.19
자녀교육비	523.8	449.3	2.80*	1.17
양육비지출수준	빈도 (%)		x ²	
다른 가계 보다 적다	44(28.8)	50(25.5)		
다른 가계와 비슷하다	68(44.4)	111(56.6)		
다른 가계 보다 많다	41(26.8)	35(17.9)		

a) 결측값(missing value)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 p<.05 **p<.01 ***p<.001

2) 자녀양육관련 비용

<표 4>는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와 추가적인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계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자녀양육관련 비용 및 양육비 지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정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자녀양육관련 비용을 자녀양육비 총액과 자녀교육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추가적인 출산을 계획하는 가계 보다 저출산을 결정한 가계에서 유의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출산가계의 경우,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녀 한명에 대한 기대이익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총 소비지출의 25.6% 가량인 67만원을 자녀간식비, 자녀의류비, 자녀교육비, 장난감 구입비 등 자녀양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었으며,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는 총 소비지출의 24% 가량인 56만원을 자녀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녀교육비로 저출산가

계는 52만원을, 출산계획 있는 가계는 4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에서 교육비 지출이 소비지출비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다가, 이 중 대부분을 자녀교육을 위해 지출할 정도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자녀양육비 총액에서 자녀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두 집단 모두 78~79%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각 가계가 현재 자녀양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다른 가계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되는지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가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집단에서는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다른 가계 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많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저출산가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서,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자녀 한명에 대한 기대이익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집단과 많은 비용 지출을 인지하는 부모집단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있는 가계의 자산, 부채 규모
(n=355, 단위: 천원)

	전체가계			보유율 (%)		보유가계		
	저출산 가계 (n=154) ^{a)}	출산계획 있는가계 (n=201)	t-stat	저출산 가계	출산계획 있는가계	저출산 가계	출산계획 있는 가계	t-stat
자 산								
현금성자산	12,850.6	18,593.5	-1.98*	61.0	73.1	21,053.2	25,423.8	-0.89
투자자산	12,925.3	17,853.2	-1.05	48.1	63.7	26,898.6	28,035.2	-0.15
부동산	180,597.4	174,502.5	0.24	69.5	76.1	259,925.2	229,248.4	0.53
기타자산	27,798.7	26,554.7	0.21	53.3	65.7	52,207.3	40,435.6	1.34
부 채								
단기부채	2,585.1	4,733.3	-1.37	44.2	54.7	5,854.4	8,649.1	-0.91
장기부채	22,961.0	16,345.8	1.23	48.7	63.2	47,146.7	25,870.1	2.34*
순자산 ^{b)}	-2,128.9	2,671.3	-2.21*	71.8	76.3	286,030.0	288,623.8	-0.10

^{a)} 결측값(missing value)으로 인해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b)} 순자산 = 총자산 - 총부채

* p<.05 **p<.01 ***p<.001

3) 자산 및 부채구조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보유비율 및 평균자산액과 평균부채액을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두 집단의 자산 및 부채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각 항목별로 보유자산이 없는 가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자산규모를 비교한 결과, 현금성자산과 투자자산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보유액이 더 높았으며, 현금성자산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부동산과 기타자산의 보유액은 저출산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이 61%,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48%,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70% 가량이었으며,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는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73%, 투자자산 보유비율 64%, 그리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66%로서, 전반적으로 출산계획이 없는 가계의 자산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부채 규모는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신용카드, 세금미납액, 외상, 할부 등의 단기부채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자동차 주택대출 등의 장기부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저출산가계의 44%,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55%가 단기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저출산가계의 49%,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63%가 장기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채가 없는 가계를 포함하여 평균액을 조사한 결과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가계만을 대상으로 평균액을 조사한 결과 모두에서, 단기부채액은 출산계획 있는 가계가, 장기부채액은 저출산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채보유가계의 장기부채액 평균만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저출산가계의 경우, 장기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유가계가 지고 있는 부채액이 유의하게 높기 때문에 장기부채 부담이 미래의 경제생활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초래하여 저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성자산, 투자자산, 부동산 및 기타자산의 총합에서 단기부채액과 장기부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순자산 수준을 비교한 결과,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까지 포함한 전체 조사대상에서 저출산가계의 순자산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짐으로서, 자산 보다 부채 수준이 더 높은 상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저출산가계의 장기부채 평균액이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며, 가계의 재무안전성이 낮기 때문에 향후 자녀출산 결정에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4) 가계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앞서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 자산 및 부채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비교하였으며, <표 6>은 두 집단이 현재 가계의 경제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인지하며, 향후 5-10년 내에 가계 경제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경제수준을 0단계부터 10단계로 구분한 척도를 제시하고, 현재의 가계경제수준과 미래의 가계경제수준을 표시하도록 한 결과,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 모두 현재의 가계경제수준은 4.9정도로 중간계층에 속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향후 5-10년 후 가계경제수준에 대한 전망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가 7.04로서, 저출산가계 6.43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미래의 가계경제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가계들이 추가적인 자녀출산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내수시장의 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계들이 경제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심리가 적지 않게 반영되었으리라 사료되지만, 아무튼 전체가계의 90% 가량이 현재 보다는 나은 미래를 예상했다. 특히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는 94% 가량이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가계(85%)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자녀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물론 현재의 소득수준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경제적 기대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자녀출산과 양육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중요한 재무관리 영역이기 때문에 가계경제의 안전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무계획 없이는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

<표 6> 저출산가계와 출산계획있는 가계의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n= 355)

	저출산가계	출산계획있는 가계	
	평균 (표준편차)		t-stat
현재 경제수준 인지 (0~11단계)	4.94(1.26)	4.92(1.25)	0.12
미래 경제수준 예상 (0~11단계)	6.43(1.38)	7.04(1.13)	-4.41***
	빈도 (%)		χ^2
경제적 기대 낙관적 (현재<미래)	128(85.3)	183(93.8)	6.92**
비관적&무변화 (현재≥미래)	22(14.7)	12(6.2)	

*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을 선택한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구조를 분석파악하고, 이들의 특성을 자녀계획이 있는 가계의 그것들과 비교함으로써, 저출산결정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연령이 높고 직장노동에 참여하는 아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계에서 저출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저출산가계는 자녀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 따르는 기대비용을 더 높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녀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보다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따르는 기대비용이 높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취업한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출산 및 양육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직장노동의 기회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한다는 미안함을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양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전비용 역시 증가한다.

이러한 점에서, 저출산가계의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수준이 더 높다는 점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저출산을 결정하는 가계는 자녀의 양 보다는 자녀의 질을 통해 자녀에 대한 기대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으로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자녀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러한 현상의 확산은 저출산현상의 지속화뿐 아니라, 자녀양육 및 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이라는 부작용을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저출산현상의 지속화를 방지하면서, 자녀의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질의 양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보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결과, 저출산가계는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고 자녀 양육 및 자녀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장기부채가 많아 순자산이 낮다는 경제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즉, 유량적인 소득과 소비지출수준은 높지만, 저량적인 자산상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가계는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에 비해 미래의 경제수준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두 집단간의 소득과 소비지출구조만을 비교하면 저출산

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 부분을 논의하기 어렵지만, 자산상태나 미래에 대한 경제적 기대수준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봄으로서, 저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소득수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계경제의 안전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재무계획이 바탕이 되어야만 자녀출산 및 양육이라는 재무결정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결국 각 가정마다 20만원의 출산보조수당을 주는 것이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금액을 모아 육아 및 교육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질 높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가계의 자녀양육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조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출산 지속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입안자, 인구 보건 복지분야 행정가 및 전문가들에게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자녀출산의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는 미혼 혹은 신혼기의 잠재적 의사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비를 비롯한 자녀양육비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탈가족화 등 현대사회의 가치관 변화가 지속되는 한 출산을 감소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인 바, 저출산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저출산 현상을 다각도에서 이해하는 가운데 자녀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2004년 1월 18일자). 윤흥식 시론: 저출산 원인부터 살피자
 문숙재·정순희·허경옥(2000). *가족경제학*. 서울: 교문사.
 조선일보(2004년 6월 28일자). 가족표어 어떻게 변했나
 중앙일보(2004년 9월 15일자). 애 없는 부부 24% 출산계획 없다
 통계청(1980~2002). *인구동태통계*
 통계청(2004). 2004년 2분기 가계수지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 조사보고.
 한국일보(2003년 2월 18일자). 2100년 한국인구 현재 절반이 노인
 허경옥(1997).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액 측정: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 연구*, 8(2), 1-19.
 Becker, G. S.(1993). *A treatise on the famil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Bryant, K. W.(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저출산가정의 가계경제구조

유 현 정(충북대학교 교수)

위 연구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가계의 경제구조 분석을 통해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할뿐만 아니라 학문적, 정책적으로 많은 의의를 담고 있다. 또한 저출산 가정을 현재의 자녀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등은 매우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시도로 보여진다. 그러나 “저출산 가정”을 정의함에 있어 무자녀가정이 포함되었다면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따르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보다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쉬움을 남긴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논문의 기여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위 연구는 무자녀 가정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자녀수가 1명인 가구 중에서 앞으로 더 출산할 계획이 있으면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로 분류하고, 출산 계획이 없으면 저출산가계로 구분하였다. 자녀수가 1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출산가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녀수가 1명이더라도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계획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저출산가계를 구분해 낸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저출산가계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느라 그러했겠지만, 저출산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무자녀가계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 가계당 자녀수 감소보다는 무자녀가정이 늘고 있는 것이 저출산의 주요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출산계획이 없는 가정의 경우에도 이것이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인지, 불임 등에 의한 비자발적 선택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위 연구는 가계의 소득, 소비지출 수준뿐만 아니라, 자산수준, 부채수준 및 경제에 대한 주관적 전망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장기부채부담이나 미래 경제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저출산결정과 관련된 주요 요인임을 밝히는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자녀양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재무계획을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저축,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이용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수집되었다면 좀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위 논문에서는 저출산결정에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문제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기술되지 않아 연구결과 해석에 있어 준거기준이 명확치 않다. 이에 이론적 배경에서 자녀 수요에 대한 모델과 함께, 선행연구결과들을 정리, 기술할 것을 요망한다.

4. 저출산시대의 가계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제언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일본은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자녀 2명까지 각각 월 5000엔 (약 5만원), 3명째 부터는 1만엔(약 10만원)을 주고 있다. 당연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일본에서 출산을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는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이다. 또한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이 기간 중 소득의 40%를 지급받는 제도가 있으나, 사실상 비정규직 여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권리자체가 없다.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보기 좋게 실패한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일본을 쫓아가고 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5. 또한 자녀의 기대이익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가족경제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자녀에 대한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용이했을 것이다.